

불뚝 맞은 평화당, 호남 민심잡기 총력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연락자 명판식 및 제2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대표, 권노갑 고문, 정대철 고문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최근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논란으로 지역 민심이 들쭉이 자 호남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 평화당이 분위기 쇄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목포 지역 국회의원인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손 의원과 언쟁을 주고받은 터라 이번 사태로 인한 민심의 변화를 살피는 모양새다.

26일 평화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다음달 6일 창당 1주년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체하기 위해 본격적인 민심잡기에 돌입하기로 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지난 25일 국회당 회의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연락자 명판식을 가졌다.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김대중 정신을 평화당이 계승·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진은 1990년 7월21일 당시 평민

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이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민자당의 폭거 규탄과 의원지 사퇴결의 및 총선추진 결의대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이다.

명판식에서 정동영 대표는 지방자치제 도입을 이룬 김 전 대통령처럼 평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앞에는 김 전 대통령의 존영(남의 사진이나 화상 따위를 높여 이르는 말)이 걸려있고 등 뒤에는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연동형 비례제 관철'이라는 각오가 걸려있다. 평화당은 2020년 제, 국회의원 뽑는 방식을 바꾸는 다당제 부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당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호남을 기반으로

투기 의혹 논란에 관심 집중...목포 민심 들쭉 손혜원 vs 박지원 언쟁 영향...총선 당력 집중

한 정당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1차 조강특위 심사결과 37개 지역위원회가 평가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 8곳, 부산 1곳, 인천 4곳, 광주 7곳, 대전 1곳, 경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6곳, 전남 7곳 등이다. 해당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1차 개편대회를 치른 뒤 2차 조강특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지역도 개편대회를 치러 21대 총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에는 광주 송정역과 전주역 등에서 고향 방문 귀성객 맞이 인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호남 등 곳곳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을 직접 회의에 참석시켜 고충을 듣기로 했다는 점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이라고 설명했다.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에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이해충돌' 부분에 관해서도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이나 정직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평화당은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과 공직자 부정청탁방지법인 김영란법에 이해충

돌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따라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평화당은 내주 중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이해충돌방지조항 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도 열 계획이다.

다만 평화당의 민심잡기 행보가 어느 정도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국은 물론 호남에서조차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국 지지율이 하락세임에도 평화당의 지지율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평화당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23일 진행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이 6.8%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54.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3%p 늘었지만 평화당은 3.2%p 줄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벌인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전국과 호남 지역에서 동일한 지지율인 1%를 얻는데 그쳤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국 37%, 호남 63%였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응답률 16.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왼쪽부터 김진태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국당 전대 주자들 '우향우' 가속 페달...자총수 지적도

2·27 전당대회에 출마할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보수 적' 동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후보들마다 쏟아내는 강성 발언이 정치권 안팎의 압박에 오르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정치권에 한 번도 발을 들인 적이 없는 '신인'이지만 공안검사 출신인 점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경력'으로 내세워 당심 훑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공안검사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지켜왔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통합진보

당을 해산하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홍준표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업적인데 단지 정부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분이 그걸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면서 대우 경쟁력을 과시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다. 해산해야 한다고 어려운 건의를 드렸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했고,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하게 됐다. 그게 진로"라고 한발 물러섰다.

황 전 총리는 인천의 한 특강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이북형을 독살했고 고모부를 공개 처형한 인물"이라며 "그런 지배세력이 갑자기 귀여운 인물로 바뀌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당원들의 향수를 자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북핵 대응에

황교안 "나는 공안검사 출신...통진당도 해산시켜"
홍준표 반발 "통진당 해산은 박근혜의 정치 업적"
오세훈·김진태·안상수 "우리도 핵개발" "핵무장"

당을 해산하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홍준표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업적인데 단지 정부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분이 그걸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면서 대우 경쟁력을 과시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다. 해산해야 한다고 어려운 건의를 드렸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했고,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하게 됐다. 그게 진로"라고 한발 물러섰다.

황 전 총리는 인천의 한 특강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이북형을 독살했고 고모부를 공개 처형한 인물"이라며 "그런 지배세력이 갑자기 귀여운 인물로 바뀌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당원들의 향수를 자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북핵 대응에

수그러진 손혜원 논란 vs 떠오르는 서영교 의혹

양승태 구속되자 "서영교도 적폐" 두드러져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논란이 점차 수그러드는 가운데 25일 야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정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특히 전날 새벽 이른바 '사법농단'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새벽 사법 행정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 앞으로 야권이 어떤 태세를 갖추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당연한 귀결"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사법농단을 이어간 전 사법부 최고수장"이라는 등 날

세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서영교 의원의 재판정탁 의혹에 대한 정반대 반응을 나타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오전 현안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의원 관련 당내 조치에 대해 묻자 "지난 최고위 이후 서 의원이 당직을 내려놓고 지속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검찰도 수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과 달리 비판적 여론이 강한 재판정탁 의혹의 서 의원에 대해선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적에는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된다"

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를 '이중잣대'라 지적했다. 또 "양승태가 적폐면 서영교도 적폐"라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향한 국민의 단죄"라며 "양승태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 사법개혁의 마중물이란 의미"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양승태가 적폐면 재판을 정탁한 서영교도 적폐"라며 "이를 관망으로 덮으려는 정부여당의 시도 역시 적폐다. 남의 허물은 들추면서 내 허물은 덮는 정부여당의 이중잣대 역시 적폐다. 사법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전방위적 비위 의혹을 받는 손혜원 게이트,

서영교의 재판정탁과 같은 내부적 폐의 적결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내에 '국회 의원 재판정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영교 의원 뿐 아니라 전병헌·이근현·노철재 전 의원 등 국회와 법원의 부당한 결탁은 적폐라며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위원장인 채이배 의원은 특위 위원장직 수락의 변에서 "행여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루돼 있다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에 서영교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김승희 한국당 의원 등 20여명이 발의한 안으로, 서 의원 의혹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규정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